

5·18진상조사위 첫 ‘행불자 지도’ 만들었다

상반기 보고서 발간...보상신청 242명 전수조사, 183명 여전히 행불 행불자 찾기 유전자 분석 11월께 나올 듯...진상조사위 활동 1년 연장

1980년 5월 전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관계당국에 ‘행방불명 보상신청’을 한 242명 가운데 183명은 42년이 흐른 현재까지 행방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에 의해 행불자로 인정된 85명과 함께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98명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무연고자 등 행불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기록에서 드러난 행불자만 183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5·18 행불자는 주로 노동·무직 등 서민층이었고, 행방불명 시기는 시위 참가 및 시내 출타 도중으로 파악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지난 19일 펴냈다.

5·18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행불자 전수 조사

및 행불 경위 추적 결과를 담고서 이른바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5·18 행불자 문제는 보상을 위한 심사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5·18진상조사위의 전수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신청 접수 과정에서 신고된 242명의 보상신청서에서 출발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유가족과 보증인, 참고인 등 진술을 근거로 85명을 행불자로 인정했다. 5·18진상조사위는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157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불인정자 59명은 5·18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공공기관 서류 발급 기록 등이 확인되는 등 생존·사망 흔적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일단 5·18 행불자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행불 인정자와 행불 불인정자 모두 행방불명 시기는 5·18 당시에 대부분이었고, 행불 장소는 광주 일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불 원인은 시위 참가 및 시내 출타 등으로 파악됐다고 5·18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행불 인정자와 불인정자는 주로 공인 등 노동자와 무직자 등 서민층이 다수로 나타났다. 행불자 보상 신청서를 낸 242명 가운데 무직자가 68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 53명(21.9%), 농·어업 31명(12.8%), 학생 26명(10.7%) 순이었다.

전수조사를 마친 5·18진상조사위는 행불자 찾기를 위한 유전자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암매장 추정 사건 발굴 과정에서 확보한 유해와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 데이터를 대조하는 작업이다. 광주에서는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해 261구 외에도 2020년 4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솔로몬파크 공사현장에서 유해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또 1981년 황룡강 일대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현재 영락공원에 임시 매장)의 유해 12구에

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18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18진상조사위는 이들 유해에서 확보한 시료 295건과 유가족 유전자 대조 작업의 결과가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전수조사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을 위한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간다. 전일빌딩 탄흔 전수조사는 앞서 헬기 사격 탄흔이 확인된 전일빌딩 10층뿐 아니라 8층에서도 추가 탄흔이 발견되면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 작업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등 사망에도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활동 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되면서 5·18 진상조사위는 국가보고서 작성 기간 6개월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풍암저수지 주차장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광주 도심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시신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차량 내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 차량은 주차장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운전석 대시보드에서 라이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설·건축 관련 자영업자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사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통화 등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2일 시신과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차량감식을 진행한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환자가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된 20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전원조치 됨에 따라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환자 강제 전원 완료

168명 큰 충돌 없이 타병원 이송

전남방직 내 부지에 입주해 있던 요양병원이 법원 판결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전남방직 측이 강제집행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를 모두 강제 전원 조치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인동 그린요양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번 강제집행은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이후 해당 시설은 폐쇄 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폐쇄를 끝으로 해당부지 내 분쟁이 있던 모든 임차인

의 이주가 종료된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이라는 특성상 의료기구가 철거되면 입원중인 환자의 생명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앞서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 전원 절차를 진행했다.

집행관은 20일 오전 6시 30분 강제집행을 선언했지만, 환자들의 식사시간을 고려해 1시간 후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입원환자 168명 중 10명은 집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58명의 환자는 동원된 21대의 사설 구급차를 통해 광주 시내 5곳의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분산이송이 완료됐다.

강제집행에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강제집행 운영, 전남방직 관계자, 의료 종사자, 경찰·소방 등 400명 이상이 동원됐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전남방직은 2020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방직은 병원이 건물을 비우지 않자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 지난해 4월 승소한 후 지난해 6·9·12월 3차례에 걸쳐 병원장실, 원무과, 병원 구내식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해 초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 약 31만㎡(약 9만평)에 미래형 문화 복합소평물인 ‘더현대 광주’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 갈림길

경찰 “증거 인멸 우려” 영장 신청

이병노(62) 담양군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유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군수에게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유권자 식사 대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수수·성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7·8명 가운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 군수가 현재 유일하다.

경찰이 현지 단재정당이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

정한 것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및 조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압수수색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군수는 ‘일부 식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거쳐 광주지법에 접수됐으며,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상층부 잔해 철거 10월말로 연장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기둥·벽체를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이 한달여 미뤄졌다.

광주시 서구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당초 9월 16일로 예정됐던 화정아이파크 사고 동 상층부 잔해 안정화 작업 기한이 10월 말로 연장됐다. 철거 공법이 바뀌고 악천후로 작업 중단이 잦아지면서다.

철거 공법은 벽·기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가며 구조물을 조각내는 ‘코어링’ 공법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가 섞인 끈(와이어)으로 구조물을 잘라내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DWS) 공법’을 이용하려 했으나 지난달 시험 작

업 결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견됐다. 코어링 공법은 비산먼지는 덜 발생하나 DWS 공법보다 작업 시간이 2~3배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맛비·집중호우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업이 자주 중단돼 공사 기한이 늦춰지기도 했다. 철거 잔해물을 곤돌라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야 하는 만큼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철거·재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입주 주민을 받는 등 전체 철거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서구는 내다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